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 인재양성 촉진

- 교육부, 지역발전을 이끌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본격 추진
- 산업·경제권 단위의 '대학 진학-기업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조성
- 【관련 국정과제】 55-1.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55-2.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체계 재구조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24일(수)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별 인재양성 체계를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경제권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재정적 마중물로서 총 2,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산업·경제권 단위에서 양질의 교육·연구 및 취·창업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지역 내 대학 진학 후 취업과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먼저 5극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을 적극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총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권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사립대·전문대 등이 연합하는 9개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정, 시설, 장비 등을 다른 지역대학으로 확산한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는 자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이다.

각 공유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권역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또한 거점국립대와 다른 대학의 교원과 석·박사생이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상호 공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점국립대의 자원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지역 학생·교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행정 경계를 허물고 지방정부와 대학·기업이 함께 현장 인재를 기르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복수의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대학-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모델을 수립해 제안하면, 교육부는 6개 내외 우수모델을 선정해 모델당 매년 100~150억 원의 사업비를 4년간 차등 지원한다. '26년에는 총 8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기업 협의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취창업 지원 등의 모델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거나, 초광역 단위의 현장실습·직무실습(인턴십)으로 학생들의 현장 직무 역량을 제고하는 모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에 기반한 초광역 단위의 정주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1.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
2.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기본계획

담당 부서	대학지원관	책임자
	지역대학지원과	담당자